

전경련 신춘포럼 초청 연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매우 영광스럽지만,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또 더 잘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시기에 정부를 대표하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에 없던 일입니다. 대통령이 한 시간씩 시간을 잡아서, 그것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다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활달하고 변화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희망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경제주체들의 책임을 함께 얘기하고, 협력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잘

맞고 또 믿음이 생기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나는 기회만 보고 책임은 남에게 미루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정부라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문제에 관해서 지적하거나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다르다.'는 식으로 논쟁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확인해 보자, 적어도 참여정부 남은 4년 동안 우리 기업인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하고 일하고 생활해도 좋겠는가 한 번 확인해 보자,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이 경기입니다. 경기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경기진작을 위해서 결국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규제를 풀거나,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리게 하거나, 물가가 오르더라도 우선 경기부터 살리고 보자며 뒷날 경제에 주름과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그 점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해 왔습니다.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쓴다고 썼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조 5,000억원의 재정투자를 했습니다. 정부의 판단과 함께 가면서도 한국은행은 독자적으로 주의 깊게 금리·통화 정책을 운용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 왔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은 옳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황이 매우 나빴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가 나쁘면 정부가 욕을 먹

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참여정부의 경기 정책에 ‘큰 과오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나쁜 것이 참여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이 아니므로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대처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경기변동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경기대책에 무리가 있으면 그 이후 경기 하강기의 진폭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 37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카드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과 약 300만명의 신용 불량자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에 불안이 온다, 금융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북핵문제로 언제 혹시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그로 인한 고유가, 사스(SARS) 등등의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외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시장질서에 맡겨야 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시장질서에 맡겼더라면 약 90조원에 이르던 카드 관련 채무가 일거에 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드사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맹점 거래, 카드 대출, 카드사에 돈 빌려 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일거에 붕괴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안정된 경기대책을 쓰면 경제는 살아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너무 심각하면 장차에 있어서 잠재적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제의 체질 자체가 취약해지거나 붕괴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작년 4월에 카드 회사에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를 2개월간 동결하는 권고적

조치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했을 때,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 고 비판하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카드채 문제는 시장의 실패에 해당되는 부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내버려 두고 보아야 합니까? 시장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권고적 개입을 했습니다.

관치경제에 대한 사회의 여러 가지 견제가 없었더라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불안이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좀더 과감한 수단을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정립되어 가는 우리 시장질서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고려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정도의 조치를 한 것입니다. 비판을 받더라도, 막상 같은 상황이 되풀이됐을 때 아마 비슷한 선택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와서 LG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부가 나섰습니다. 유동성 위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한 것인가, 지금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제정책 책임자들에게 점검해 본 결과로는 '시장의 신뢰에 대해서 아직 확고한 믿음을 갖기에는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면 시장이 심각한 위협에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수익성은 2~3년의 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전문가들은 카드 시장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가? 같은 값이면 영리적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정부가 시장에게 강요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별 금융기관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과도기를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금융시장이 붕괴할 조짐이 있으면 그 위험을 결코 정부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오고 경제가 붕괴하는 수준까지, 시장 자율의 원칙만 내세워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그런 방관자적인 태도로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만,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신용불량자 사태입니다. 과거의 불경기에는 없었던 새로운 상황입니다. 소비가 살아나야 하는데 어떻게 소비를 살릴 것인가, 수출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 어지간히 돈이 간 것 같은데 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가, 1년쯤 지났으면 살아날 때도 됐는데 더딥니다.

신용불량자 사태를 생각해 보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어찌하면 아주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먼저 빚을 갚아야 될 형편이니 소비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연체에 걸려 버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계운용의 계획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쫓기기 시작합니다. 개인 가계가 쫓기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가 풀리기 전에 소비가 살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각료들에게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 고 끊임없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재촉해서 질문하면 우리 경제 각료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일반적인 경제 원리 그 이외에 조그마한 변칙이라도 도입하게 되면 급작스럽게 돈을 빌린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폭발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연체가 하루아침에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신용불량자 대책에 관해서는 갓난아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우리 경제팀이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깊이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 관점으로, 또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대통령이 이처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

을 강하게 했을 때 우리 경제팀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경제팀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라는 수준으로 자주 질문하는 것이지, 그 이상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얘기하면서 누구도 어느 영역에서도 딱 부러진 대책을 제안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개 이렇게 관리해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인지 방책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금융당국, 각 금융기관, 정부 모두가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을 쓰지 않고, 그러면서도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예측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팀에게 맡기되,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구성과 개개인의 변제능력, 그 다음에 각 계층별 신용불량의 형태가 기업·가계·부동산 가격 등등에 끼치는 영향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계의 지도자들과 정책 당국이 잘 협력하면 이 문제도 큰 무리 없이 관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한 것 이외에도 몇 가지의 금융부실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해소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 관리와 함께, 경제에 일거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드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한 마디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신용불량자 문제는 잘 대처를 하겠지만 핵심은 투자라고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외국 기업이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규제문제가 따라 나옵니다. 규제, 풀 것은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푸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정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론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고,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해서 그곳에서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성공적인 경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을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입되어야 하는 몇 가지 규제에 대해서 반대가 완강합니다.

특히 의료 부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원·의료, 이것은 이미 정부 내의 합의를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고, 또한 한국에서 의료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독으로 또는 세계적인 병원들과 손잡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한 번 벌이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권고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우리가 가진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이, 그야말로 동북아시아 차원에서의 의료산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근무 편의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어 주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선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학 교육의 자율을 대폭 확대하고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학 교육 일반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대학 교육이 세계 일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교육정책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물처럼 얽혀 있어서 코 하나를 건드리면 그물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건드리기 어려운 데다가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 완강합니다.

교육계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더 빠른 개혁을 원하는 흐름이 있고, 빠른 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단도 교육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흔들거나 또는 그들에게 새로운 불편, 불안을 주는 개혁에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교육개혁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내놓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교육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학 교육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자본, 외국의 경영자 또는 직장인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우선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추어 나가는 쪽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풀 수 없는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 풀어 버리면 사람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고, 결국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밀지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이것은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적어도 우리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규제를 그냥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땅이 비좁습니다. 물도 부족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요구는 점차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함부로 훼손하는

그런 규제완화는 매우 주의 깊게 해나가야 합니다. 지킬 건 지키겠습니다.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토론을 해 본 결과 규제가 많아져도 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제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이 이게 되는 일인지, 이곳에 공장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모호해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결국은 도장을 찍기는 다 찍는데, 도장의 개수가 많고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바로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불명료한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고치겠습니다. 법만 보면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선례를 축적하고 공개함으로써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아주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규제 그 자체를 완화하는 것보다 규제를 통과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경영과정에서 개별적인 문제해결에 각기 노력하시겠지만, 이 문제가 시스템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적용되어야 되는 문제라면 그것을 소위 제도개선 과제로 반드시 제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규정을 바꾸든 윈-스톱 서비스를 하든 또는 민원대행이나 지원팀을 만들든지 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새롭게 가는 규제 극복의 전략으로 정부가 반드시 채택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수요자로부터 출발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 우리도 그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극복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경제단체 대표 한 분이 골프장 하나 짓는 데 780개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780개 도장 중에는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규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발목 잡는 일은 없도록 하고, 또한 일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민간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빨리 해소하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같은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가치에 대한 판단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까지 골프·관광·위락 이런 데 대해서는 그것이 마치 사치성 소비이고 불건전한 산업인 것 같은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구조가 변화해서 아무리 제조업부문에서, 또 금융부문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더라도 서비스업을 통해서 고용을 늘려 나가고 그 고용을 통해서 소득을 분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장서겠습니다.

아무리 발전시켜도 제조업의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제조업 고용 비율이 선진국과 약 20~3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비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도 잘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업의 육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전력 요금에 서나 또는 조세에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규제와 지원에 있어서 서비스업이 차별 받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다듬어서 지적해 주시면 하나하나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노사문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맡겨 놓지는 않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반드시 단호하게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사문제는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든 사람이 예측할 수 있게 하면 기업도 노동자들도 그 정

책 방향에 맞추어서 자기 행동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는 노동조직에서 정부의 정책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밀고 나온 경향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이 친노(親勞) 정권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많은 분규를 일으켰다. 그래서 사회가 어지러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친노 정권이 아니라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가다듬어져 가는 초기에 기선을 잡기 위한 싸움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있어서 작년에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그 전년도보다 18%가 줄었지 않습니까? 불법파업은 60%가 줄었습니다. 노사조정이 성공한 건수는 50%가 늘었습니다. 노동운동의 흐름을, 노사관계의 흐름을 좌우하고자 하는 선도적 투쟁의 선봉에서 있는 집단만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투쟁을 앞서서 이끌었을 뿐,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이미 작년 한 해 동안에 상당히 안정된 노사관계가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계를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정보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좋아졌습니다. 올해에는 더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나쁘게 보인 것은, 그렇습니다. 경제단체들 역시 정부 길 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경련에서도 그런 전략이 있었겠지요. 기회만 되면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들깁니다. 우리 언론들도 그 말은 크게 잘 들리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마치 노동정책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봄 평 제 울음에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자기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면 아침에 신문 펼

쳐 들고 ‘아이고 큰일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작년의 노사문제를 좀더 비관적인 방향으로 증폭시켜서 이해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냉정해지자는 것입니다. 문제를 비관적으로 또는 확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면 이제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공론과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한국의 노사분규가 선진 어느 나라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적인 노동운동이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밝혀 왔듯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사업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해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만 불법으로 다루어 온 것이 우리 정부나 사법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아직 정부 안에서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디만, 쟁의의 사유가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디까지 합법의 선을 그을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올 한 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든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 해석에 불명확함이 없고, 상호간에 영역의 심각한 침범이 없고, 그래서 불안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단체와도 단호할 때 단호하지만 성실히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노동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과정에는 강·온 양면의 전술이 구사됩니다. 물건을 사고팔 때도 돈 더 받고 싶으면 안 판다는 것 아닙니까? 값 깎자고 하면 ‘이 물건은 당신하고 인연이 없소. 그냥 판 데 가서 알아보시오.’ 라고 합니다. 사실은 팔고 싶으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노사분규의 해결에 있어서도 ‘아침에 즉시 그만두지

않으면 오늘 중으로 공권력 투입한다.’ ‘강경한가 보다.’ 그런데 점심 때 가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협상에 있어서도 미국과 북한이 항상 상호간에 그렇게 먼저 강경한 목소리들을 가지고 상대의 요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체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원칙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강·온의 카드는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정책이 아니지요. 그것을 지나치게 크게 확대해서 받아들였거나 전달한 것 아닙니까?

어떤 강도 직선으로 흐르는 강은 없습니다. 그래도 끝내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다로 갑니다. 정책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융통성·유연성은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노사문제가 안정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안정되더라도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안정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노사 양쪽이 정부와 함께 무릎을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가십시오.

적어도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임금상승률이 이대로 가서는 우리 경쟁력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자제하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소위 같은 노동계 안에서 임금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사회적 보장의 격차도 심각합니다. 노동계에 있어서의 소득의 불균형, 보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인상을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 사이의 합리적인 조정의 문제를 올해의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해소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노사관계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향상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

도 함께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경영계에서도 이 점에 관해서 깊이 이해하고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최선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에 대해서 각 집단이 동의하지 않고 전부 저항했을 때 그 정책집행의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지만, 반대로 가장 좋은 정책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해집단이나 각 경제 주체들의 합의 수준이 높아서 그 정책을 협력하며 함께 운용해 갔을 때에는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하게 될 때 각자 보기에는 최선이 아니더라도 좀 양보하고, 우리가 모두 협력한다면 예상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이번에 한 번 증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같은 생각으로 설사 좀 불합리하다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서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의 유연화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의 저항이 문제이지 그 기준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경제하는 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판례가 만들어 준 기준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나 권고의 기준으로 삼아서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점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의 유연화 측면에 있어서의 전략적 요구와 함께 한편으로 또 다른 요구도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모델을 가지고 소위 4조 3교대 또는 4조 2교대의 작업운영

을 통해서 일자리도 서로 나누고 생산성도 훨씬 더 높여 나가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 보편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게 이 운동을 바라보고 또한 적용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도 우려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흑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함께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면서, 일면에 있어서는 소위 유한킴벌리 식의 일자리 나누기를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놓은 경쟁력 모델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구조조정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조정 안 하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열정을 가지고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해 나가는 초일류 기업들의 사례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은 그 모델대로 한국에서 보다 더 넓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개의 정책들을 함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요인은 경쟁력입니다. 인건비라든지 땅값이라든지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월등한 경쟁력을 갖지 못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기업 환경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경쟁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아마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 아울러서 인재양성을 통해서 핵심적인 경쟁력을 향

상시켜 나가자, 그것이 전략입니다.

인력양성에 관해서 정부의 전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정책이 기술혁신에 맥이 닿아 있으면 우선순위를 높이겠습니다. 고급인력 양성에 맥이 닿아 있으면 우선순위를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소에서도 최고의 기술이 생산되고, 작업현장에서도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이 생산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연구소와 현장에서의 기술혁신이 함께 만나게 하는 기술혁신 전략, 인재양성 전략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개발비도 많이 주고, 세금도 깎아 주는 등 모든 배려를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개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에 서로 연구비 많이 타가기, 예산 많이 따가기 경쟁이라든지 영역경쟁이 너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획조정 권한을 과학기술부로 전부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 체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서 정부 관련 연구기관, 연구소 운영·관리에 관한 영역, 산업정책, 인력수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책임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에 넘기고, 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총리로서 조정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이미 착수했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직과 구조로서, 그리고 운영의 원리로서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술혁신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는 지역혁신 체계, 지역혁신 클러스터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이 클러스터 개념을 우리 정부도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대학과 지역기업 간의 단순한 산·학 협력관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을 위한 물적 인프라를 뒷받침해 주는 것' 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는 돈, 예산을 많이 보냈는데 특정한 몇 개의 기업과 대학들 사이에서 연구과제 몇 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기술혁신 클러스터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 지역의 네트워크이자 시스템으로서 총체적인 기업환경을 창조적 기업환경, 특히 벤처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나 케임브리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관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팀을 만들어서 실리콘밸리나 케임브리지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 무엇인지 특성을 찾아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고 전체 네트워크가 잘되게 하고, 거기에서 기술혁신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해서 한국의 기술혁신에 좀더 효과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부처 보고를 받을 때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챙기면서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도 지역혁신 클러스터라는 큰 틀 속에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줄이더라도 지금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에 힘을 쏟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편안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정책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도록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직도, 부정부패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효율성 있게 집중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독립기관이지만, 흔쾌히 동의하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기구가 이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원활하게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는 수준은 아니지만, 저는 믿을 만하다고 여러분께 감히 장담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려고 떠나려는데 보고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 외교부 개혁 추진 및 결과 보고'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만두신 외교부 장관이 써 주신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을 그만두시게 할 때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떠나시면서 후임 장관에게 또는 대통령에게 무엇을 권하고 싶은가에 관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꼼꼼이 들여다보면 외교부가 그동안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이대로 가면 외교부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매우 효율적이고 건강한 조직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부 부처 보고를 재경부부터 과기부·산자부·정통부 이렇게 네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우선 보고를 받아 나가는 일정이 대단히 빠릅니다. 종전 속도의 두 배 정도 될 것입니다. 매 보고 때마다 세 시간씩을 소모합니다. 30분 보고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의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처와 관련된 타 부처의 업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어떤 부문은 사례로 뽑아서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과악하고 있는 정도가 얼마 만큼이나.' 까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 시간 토론한다고 안 되던 일이 금방 되겠습니까만, 우리 정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세 시간 합니다. 회의 시간을 줄이라는 경영 전문가들의 권

고도 있습니다만, 줄일 회의는 줄이고 늘릴 회의는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껍데기만 점검하고 넘어갔던 정책에 관해서는 속속들이 그 허실을 판단하고 파악해서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 갑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화물연대사태 때 파업하면서 대형 트럭들이 공장 문과 도로를 막아 버렸습니다. 왜 안 치우냐고 했더니 견인차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쇠 기술자 데리고 와서 끌어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사유재산이라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긴급권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느냐, 과감하게 하라고 했더니 옮겨 놓을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인력을 동원해서 운행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근거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적법한 파업은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 전반의 질서를 결정적으로 파괴하지 않거나, 더 큰 이익을 결정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익 교량(較量) 또는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두어야 되고, 그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당진에서 일이 일어나니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평소에 파악해 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컴퓨터로 검색을 해 보니까 수십만 명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당신은 희망에 따라 비상사태에 국가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스스로 신청을 받아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국가 전반에 위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전부 점검하고, 그 사태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법을 보

완하고, 그 다음에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전체 큰 틀은 다 마련하고, 개별 매뉴얼은 20% 정도 완성했고, 나머지 작업들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의 기틀을 확실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씻어낼 것, 쓸어낼 것,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쓸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시스템과 제도를 수리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건설해야 될 제도들을 다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청소·대수리·대개조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 임기 4년 동안에 다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를 접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무회의에서 개별 문제의 잘잘못을 두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근저에 도사리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찾고, 정비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해 나가자, 그렇게 해 나갑니다.

이런 일에서부터 범정부적인 혁신운동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그냥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두 배 또는 세 배의 효율을 내야 다른 분야에도 두 배, 세 배의 효율이 나고, 그렇게 비슷한 수준의 요소 투입을 통해서 2만 달러가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힘주어 하고 있는 일, 정부혁신입니다. 혁신의 첫번째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전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의 필요성을 깨닫고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의 방법을 개발해 내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작은 성공의 모델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우선 혁신의 선도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기업하는 분들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게 확실하게 받쳐 드리도록 하고, 우리 국민

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서비스를 두 배 확대하고, 내부적 효율을 두 배 향상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가 투명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협상을 성실히 하는 기업은 노사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수한 정치적 목적,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 노사관계가 안정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투명해야 공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치권이 뭔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정치권 때문에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고 이중장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렵더라도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경쟁과 거래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쟁력이 새로운 차원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서비스도 좀더 늘리겠습니다. 작은 정부론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 줄이면 작은 정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필요한 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그들이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는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 그 밖에 질서·치안·사회적 안전 등 최소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보장해야 하는 서비스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문화·환경과 같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공적부문의 지출을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잘 조절하면서도 결국 국민을 위한 서비스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에 있어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인턴과 시간제 고용을 좀더 확대하는 등 시험이 아닌 새로운 채용의 관행을 만들어서 취업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후보 때 집배원에게 표 달라고 인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었는데 쳐다보질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째서 관심이 없을까? 그의 삶이 그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몇 시에 나오니까?' '아침 여섯 시에 나옵니다.' '몇 시에 퇴근합니까?' '저녁 여덟 시에 퇴근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왔는데 한 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일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고는 생산성 향상, 경쟁력은 그거 다 공염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들이 약간의 여유시간을 가지고 직업에 대한 불안이라도 없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택배회사와 경쟁해서 성공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정관계로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뚝배기보다 장맛' 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또는 과거 몇 가지의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전달된 대통령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경제를 알겠느냐?' '잘 관리하겠느냐?' 혹시 이런 불안이 있었다면 씻어 주시고 한 번 믿음을 가지고 힘을 합해 봅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정부에도 뒤지지 않는 책임 있고 효율성 있는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